



제301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
제4차 자치행정위원회

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
[진접읍 풍양배드민턴장 설치]

검 토 보 고 서

2024. 3. 13.

자치행정위원회
전 문 위 원

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

1. 제안경과

- 제안일자 : 2024. 3. 6.
- 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2. 제안이유

- 제29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진접읍 풍양 배드민턴장의 설치부지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· 진접읍 풍양배드민턴장 설치-----체육과

3. 주요내용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진접읍 내각리 163번지(관리자 : 캠프)
- 사업규모 : 부지면적 3,633㎡[배드민턴장 5면(565㎡), 부대시설 1식
(주차장, 화장실, 휴게실 등)]
- 사업기간 : 2023. 9. ~ 2024. 12.
- 변경사항

구분	대체시설 부지(종전)	대체시설 부지(변경)
사업 개요	위치: 진접읍 장현리 산25-16 사업기간: 2023. 5. ~ 2024. 10.	위치: 진접읍 내각리 163 사업기간: 2023. 5. ~ 2024. 12.
규모	부지면적: 4,500㎡, 건축면적 800㎡ 배드민턴장 5면, 부대시설 1식	부지면적: 3,633㎡, 건축면적 800㎡ 배드민턴장 5면, 부대시설 1식
사업비	1,900백만원(시비 100%) (설계비: 22, 공사비: 1,878)	1,900백만원(시비 100%) (설계비: 22, 공사비: 1,878)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2023년도에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진접읍 풍양 배드민턴장의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,
- 당초 수립된 지역은 진접읍 장현리 산 25-16번지였으나, 사업부지와 인접한 국가지정문화재 남양주 영빈묘(장현리 175번지)로 인해 문화재청에 3차례나 현상변경허가를 협의하였으나 불허됨에 따라 부득이 대체 부지를 검토하는 사안입니다.
- 진접 2 공공주택지구의 편입으로 기존 풍양 배드민턴장이 철거되는 만큼, 현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여가 선양을 위해 가용 가능한 최대의 체육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, 대상 부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와의 원만한 협의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

☑ 문화재보호법

제35조(허가사항) ① 국가지정문화재(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받아야 한다.

1. 국가지정문화재(보호물·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·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)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2. 국가지정문화재(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)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<이하 생략>